



주간통일정세 2009-40(2009.09.28~10.0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4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국가원수 아닌 2인자 공항영접 처음(10/4, 신민망; 환구시보)

- 중국 관영 신민망보의 인터넷판인 신민망은 애초 당연히 김영일 북한 총리가 원 총리 환영식을 주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자기 군중의 환호 소리가 들려서 보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났다고 하며, 현장의 중국 기자들도 모두 놀랐다고 전언, 중국과 홍콩 언론들의 현장 중계를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붉은 카펫 위를 걸어 비행기에서 내리는 원 총리 일행을 맞았음. 약 30분 동안 진행된 환영 행사 동안 김 위원장과 김영일 총리, 원 총리는 함께 3군 의장대를 사열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원 총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본 뒤 자신의 차에 탑승한 뒤 떠났음.
-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에도 널리 알려진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의 여주인공에게서 꽃다발을 받았으며, 원 총리 일행이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연도에는 수십만의 군중이 손에 꽃다발을 흔들고 “중국 대표단을 환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음. 관영 환구시보는 순안 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 양쪽에는 ‘조중 양국 우호 만세’라는 표어가 곳곳에 걸렸다고 소개, 공항에선 김 위원장과 김영일 총리 외에도 북한 당·군·정 고위 간부들과 류샤오밍 평양 주재 중국 대사, 북한에 체류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원 총리를 맞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악화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언

● 김정일, 양묘장·타조목장 현지지도(10/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앙양묘장과 타조목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 현지지도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현철해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양묘장에서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앙양묘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조성 사업은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일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만년대계의 자연개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전언
- 그는 이어 평양시 교외에 있는 타조목장을 찾아 “타조목장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타조는 사료



를 적게 먹으면서도 많은 고기와 알, 질 좋은 가축과 털을 생산하므로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짐승”인 만큼 타조기르기를 적극 장려할 것을 지시

- 김 위원장은 이 현지지도 일정과 별개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군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을 만나 기념 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촬영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리명수 대장, 최태복 김기남 당 비서, 장성택 부장 등이 함께 했음.

● 김정일, 김일성대 등 평양시내 현지지도(10/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메기공장, 12월7일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 새로 건설된 수영관에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들러 대학생들의 수영훈련을 지켜본 뒤 도서관 건설 현황을 보고 받고 도서관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토록 지시했다고 통신은 소개
- 그는 평양메기공장에선 메기의 요리법을 더 다양화할 것을, 12월7일공장에선 주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주문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당 부장,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軍하사관대회 참가자 만나(9/29,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전군 ‘초기복무사관’(장기복무 하사관)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방송은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군 초기복무사관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대회 성과를 축하했다”고 밝혔으나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전군의 초기복무사관들은 그 어떤 명예나 직위도 바람이 없이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배기 애국자들”이라며 “높은 전투기술기능과 실력으로 전투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군대의 귀중한 보배”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
- 만남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원홍·현철해·리명수 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시내 대동강식료공장과 평양방직기계공장도 현지지도했다고 중앙방송이 29일 밝힘.
- 김 위원장의 이들 공장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동행



● **김정운, 국방위통해 후계공식화 예상(9/28, 열린방송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운은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이 되는 방식으로 후계자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28일 “북한의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주장
- 방송은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제35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되는 방식으로 후계자로 확정됐으나 정운의 후계자 공식화 절차는 이같이 국방위원회를 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김정일의 유고시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방식으로 김정운 세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

나. 정치 관련

● **北김영일, 양자, 다자 핵협상 용의(10/4, 중국신문사)**

- 김영일 북한 총리는 핵문제 논의를 위한 양자, 다자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4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밝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김영일 총리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무기 활동’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인
- 김 총리는 “비핵화 실현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면서 “북한은 다자 및 양자대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원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
- 원 총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이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
- 양국 총리는 이날 총리회담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더욱 긴밀한 발전을 다짐함. 회담 후 두 총리는 경제, 무역, 교육, 여행 등의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협정서에 서명
- 중국신문사는 양국이 국경지역인 압록강변에 새로운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정식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중국 총리로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4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방북한 원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항영접 등 극진한 환영 속에 사흘간의 공식 방문에 들어갔음. 원 총리는 5일께 김정일 국방위원



장을 면담하고 북한 핵협상 재개 문제와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를 비롯한 북중 간 경제협력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됨.

● **北언론 매체들, 원 총리 ‘귀중한 친선의 사절’(10/4,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1면에 원 총리의 방북관련 사설을 싣고 “역사적 시기와 정치적 중요성으로 볼 때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며 “조중 친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방송물을 통해 원 총리를 맞는 평양은 “명절 일색으로 단장돼 있다”고 환영
-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오랜 친선관계는 오늘 대를 이어 계속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소개하고 “조중 친선은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
-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평양신문 등 주요 일간지는 원 총리의 사진과 함께 약력을 상세히 소개했고, 중앙방송도 원 총리의 약력을 별도로 소개

● **北매체들, 10·4선언 2주년 “철저 이행” 강조(10/4, 노동신문;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10/3, 통일신문)**

- 노동신문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10.4선언이 가리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민족은 능히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
- 민주조선도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행해야 할 통일대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북남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하려는 공화국(북한)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이 선언들의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남측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
-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10.4선언 채택은 “조국통일운동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라며 “역사와 현실은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
- 평양방송은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정표”라며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선중앙방송도 10.4선언 발표 2주년에 따른 북한 사회과학원의 ‘반향(반응)’을 소개



- 통일신보는 3일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글에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에 이어 또 하나의 귀중한 통일선언"이라며 "북과 남은 서로 존중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

● 北매체들, “만경대 가문 혈통” 강조(10/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김 위원장의 고조부인 김응우의 사망 131주기를 맞아 '애국애족으로 빛나는 고결한 생애'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경대 가문은 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소개
- 신문은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고 근면하면서도 의절이 강한 것이 만경대 가문의 가풍”이라면서 “김응우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만경대 가문의 애국애족의 낮은 연대를 이어 위대한 선군시대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만경대 가문의 혈통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서 계시어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10월 2일에는 김 위원장의 증조부인 김보현의 54주기를 맞아 '애국으로 빛나는 고결한 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보현이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올린 만경대 가문의 가장”이었다고 주장

● 통일신보, 이산상봉 성과 살려 화해국면 이어가야(10/3,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9.26-10.1) 행사가 열린 것을 “화해·협력의 성과”로 평가하며 남북이 “이번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의 성과를 살려서 북남관계를 더욱 활기있게 전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남북관계가 “지난 1년 반 동안 불신과 대결의 악화일로만을 걸어”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이산가족 추석상봉 문제와 관련한 '청원'을 풀어줬다면, “단절되었던 북남관계가 다시 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고 금강산에서의 뜻깊은 가족, 친척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김 위원장의 “승고한 뜻과 의지가 낳은 사변”이라고 주장

● 北, 추석상봉을 공동선언 이행과정으로 간주(10/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끝난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와 관련, “북측은 이번 상봉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정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흩어진 가족, 친척뿐이 아닌 온 겨레가 남측 당국의 금후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오늘의 상봉을 공동선언의 이행과정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9월 1,2차 상봉행사 때 열린 연회에서 남·북 대표단장들의 연설엔 “금후 북남 인도주의 사업의 추이 뿐 아니



라 전반 북남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이 담겨 있어 주목됐다”며 남·북 축 연설을 소개

- **北, 핵무기 관리·사용·확산방지에서 책임 행동(10/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핵무기의 관리와 사용, 전파(확산) 방지와 핵군축 문제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박 부상은 9월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또 “우리는 핵군비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의 사명은 전쟁억제에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핵억제력만 보유할 것이다. 유럽과 기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에서도 위협과 억제력은 정비례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뒤늦게 소개
 - 박길연 부상은 “미국은 우리 나라는 평화적 위성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횡을 부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도용되고 있다”며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미국이 핵정책을 변경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직한 핵보유로 지역의 핵균형을 보장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이어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미 행정부가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고 최근에 여러 번 성명한대로 변화의 입장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美의 대북핵정책과 연계 비핵화 노력(10/1, 연합)**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과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날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없는 세상’ 건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결의 1887호에 대해 “전반적 국제사회의 염원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중기준적인 문건”이라는 이유로 “전면배격하며 거기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언급
 - 그는 안보리 결의 1887호의 채택과 관련,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비핵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그로 인해 “평화와 안정이 심히 유린,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부터 그것을 감축하고 철폐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
 - 그는 특히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전방 전개와 가중되는 핵위협을 막는 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에 악용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북한이 “비핵국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 北로켓 발사, 주민결집 계기(9/30,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 4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북한 주민들의 “정신력을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점이 됐다고 조선신보가 30일 주장
- 신문은 ‘<현지지도 강행군의 진실 -하-> 대국적 배짱이 준비한 총공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건설의 현장에서 어려운 과제가 제기 될 때면 일꾼회의나 종업원모임에서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 발사가 난문제를 풀 수 있는 반증자료로 등장하곤 하였다”고 설명

● **北, 언론매체통해 ‘그랜드 바겐’ 거부(9/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라고 일축
- 통신은 ‘핵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남조선 고위당국자가 최근 미국을 행각 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며 이 제안을 “우리(북한)가 6자회담을 통해 핵계획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풀이
- 그러나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미(북미)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통신은 기존 북한 입장을 되풀이 하고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일괄타결안을 들고 나온 것은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
- 이어 통신은 “우리가 그 누구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받으려고 그따위 얼빠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산”이라며 “핵문제는 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에야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 대북 자극 언동 삼갈 것을 주문(9/28, 9/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 행사를 다루면서 “남측 당국이 진정으로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킬 의사가 있다면 북남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오늘의 시점에서 적어도 북측을 심히 자극하는 언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저장소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
- 조선신보는 28일 끝난 1차 상봉 행사 자체에 대해선 “통일부도 대화



국면이 점쳐지는 시점이라 산하 직원들에게 ‘금강산 가서 술마실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고방지와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남측 관계자들이 뜻하지 않은 충돌로 인해 행사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한 데 대해선 북측의 관계자들도 일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

● **北매체, 김태영장관 북핵발언 거둬 비난(9/2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9일 ‘객기는 부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북한 핵무기저장소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을 “호전적 폭언”이고 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이 발언과 관련,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남북관계가 최근 자신들의 “아량있고 대범한 주동적 조치에 의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는데 “남조선의 극우보수 세력은 겨레의 염원에 배치되게 북남관계 개선을 한사코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

● **北대사, 원칙 지켜지면 비핵화 적극 노력(9/28, 연합)**

-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는 28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과 관련, “자주권이 존중되고 평등 원칙이 지켜진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
- 그는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하려면 먼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북조선에 대한 핵위협이 근본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주장
- 자 대사는 이날 오후 영국 왕립군사안보연구소(RUSI)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 진정한 비핵화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자주권이 존중되고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아래에서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北헌법, 김정일 권한·지도이념 제도화(9/28, 연합)**

-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11년 만에 개정된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100조)”라고 규정하면서 ‘임무와 권한(103조)’으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등 6개항을 적시, 새 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106조)’으로 새롭게 규정됐음.
- 아울러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이전 헌법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등 군사관련 사항만 담았지만 새 헌법은 ‘선



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등을 감독하고 대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국방위 결정 및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기능을 부여.

- 반면 대외적으로 명목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재 김영남)의 권한은 특별사면권과 '중요조약'에 대한 비준·폐기 권한이 국방위원장에게 넘어감에 따라 상당부분 위축됨.

● 김정일, 사회주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9/28, 연합)

- 지난 4월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며 "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 9월 26~28일에 열린 추석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금강산)에서 남북 기자단과 만난 북측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을 소개하면서 "공산주의'가 헌법에서 빠진 의미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

다. 경제 관련

● 潘총장, 北 식량난 심각(10/2, 연합)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2천 400만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반 총장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식량난과 형클어진 보건 체계, 안전한 식음료의 부족 등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 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2008년 12월 발표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 보고서는 올해 북한 인구 가운데 900만명이 식량 부족으로 기근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반 총장은 "북한 인구의 70%가 공공 식량 배급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려할 문제는 정부 관리들이 배급량을 낮추고 있다는 점" 이라면서 지금의 배급량은 하루 에너지 요구량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 그는 이어 "이같이 악화되고 있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식량 지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 앞서 지난 7월 WFP는 심각한 기금 부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긴급 지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WFP는 60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5억40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지만, 당시까지 7천500만 달러 밖에 걷히지 않았다고 밝혔었음.



- **北매체, 첨단기술 회사 광고성 기사 내보내(9/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북한에서 ‘정보기술(IT)과 지질탐사 등 첨단기술제품 개발에 앞장선 두뇌집단’으로 ‘미래기술회사’를 소개
 - 통신은 그동안 “정보기술, 기계기술, 지질탐사 등 여러 분야의 제품들을 연구 개발”해온 이 회사가 소유한 핵심기술과 개발한 주요제품들로 지문인식기, 지능감시체계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으며 이런 기술과 제품들은 북한의 여러 경제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첨단 기술제품들을 적극 개발하여 여러 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

- **UNDP, 평양서 대북사업 재개(9/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2007년 3월이래 중단됐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이 재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통신은 “조선에 대한 유엔개발계획의 협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과 관련한 행사가 30일 주조 유엔개발계획 대표부에서 진행됐다”고 말했으나 재개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음.
 - UNDP 집행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자금 전용 의혹때문에 2년반 가까이 중단돼온 대북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음.

- **北, 대북투자 이집트 기업회장에 훈장(9/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일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이집트의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텔레콤 회장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훈장 수여 이유로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안고 조선과 이집트 사이의 친선과 경제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밝힘.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류영섭 체신상 등이 참석
 - 오라스콤은 북한측과 75 대 25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통해 지난해 12월15일 평양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 사위리스 회장은 수여식 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을 전달

- **北, 주요 대형건설장에 군병력 대거 투입(10/30, 평양방송)**

 - 북한 평양의 10만가구 살림집 건설 사업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이 29일 쫓겨모임을 갖고 “수도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건설하는 나날에 21세기의 진군속도를 창조”할 것을 다짐했다고 평양방송이 30일 보도
 - 쫓겨모임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한동근 상장(우리의 중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리태일 상장의 보고와 토론을 거쳐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맹세문이 채택



- 김 위원장은 강성대국 건설 목표해인 2012년까지 살림집 10만가구 건설을 중심으로 평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평양을 강성대국 달성의 상징물로 내세우기 위해 군병력을 이 사업에 대거 투입토록 지시, 9월 30일 이들 군인력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은 전언

● **北, 황해북도 미루벌 수로 개통(9/2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미루벌에 220km의 '자연흐름식' 관개수로가 개통돼 29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북한은 2006년 황북 곡산, 신계, 수안 3개 군에 걸친 총면적 420km² 미루벌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의 물을 이용한 자연흐름식 관개수로 공사에 착수
- 평양저수지 댐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서 김창식 농업상은 준공사를 통해 "황해북도 곡산군 리상리로부터 신계군에 이르는 수 백리 구간에 자연흐름식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전력과 양수설비를 쓰지 않고 미루벌의 논밭을 안전하게 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인민들의 식량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

● **평양국제상품전, 14개국 120여개 기업 참가(9/29, 조선신보)**

-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5차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14개국과 1개 지역에서 120여개 기업이 참가해 1천627종, 6만1천 700여점의 상품을 출품했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 전람회를 주관한 조선국제전람회 류정언 과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는 지난해에 비해 470여종, 4만1천700여점이 증가된 것이라며 "봄철에 비하여 가을철 전람회의 무역거래건수는 70% 수준에 있는데 해마다 그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
- 조선신보는 전람회 성과에 대해 "국내 회사들의 활동은 상품수출에 그치지 않는다"며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기술무역에 대한 지향성으로 국내 특허기술을 반영한 제품들이 출품되고 제품의 성능제고를 안받침한 새 기술이 적극적으로 소개, 선전되고 있다"고 평가

● **北, 벼 추수 시작(9/24, 민주조선)**

- 북한 농촌지역에서 올해 벼 추수가 시작됐음. 민주조선은 24일자에서 "100일 전투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기 바쁘게 황해남도 안의 농촌들에서 벼 가을걷이가 시작되었다"며 "도에서는 낱알을 한 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이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소개



라. 사회·문화 관련

● 혁명 역사를 기리는 것을 중심으로 추석 보내기(10/3,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화환을 보냈고 이들 능에서는 김영일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환 진정식이 열렸다고 북한 매체들은 소개, 만경대에 있는 김 위원장의 증조부모인 김보현과 리보익의 묘, 조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의 묘에도 화환들이 진정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
- 평양방송은 추석을 전통 민속명절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고 김일성 주석의 뜻을 이어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덕이라고 선전, 어느 해인가 김 위원장이 “애국심도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그래서 당에서는 추석을 휴식일로 선포하고 교통수단을 보장해 줘 부모들의 묘지를 찾아보게 한다”고 말했다는 것
- 북한 매체들은 이날 추석의 유래와 성묘를 비롯한 풍습을 소개했고, 추석 전날인 2일 저녁 조선중앙TV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날 평양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별도로 안내하는 방송을 내보냄. 평양방송은 “추석을 계기로 각지 근로자들이 조상들의 묘소를 찾았다”고 보도

● 北, 씨름 대중화 주력(10/2, 조선신보)

- 북한이 민족 스포츠인 씨름의 대중화를 통한 인기몰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북한의 씨름협회 흥환원 서기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사람들 속에서 민족적인 문화정서생활의 기풍을 세우는 데서 씨름의 대중화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정규체육수업에 씨름이 포함됐으며 우리의 과외 동아리격인 소조에도 ‘씨름소조’가 생겼고 조선체육대학에는 민족체육학부가 생겨 씨름강좌를 신설, 여기에도 각 도와 시, 군에 있는 청소년체육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 프로씨름선수로 양성
- 프로씨름선수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 ‘9월10일상’ 무도경기대회와 ‘정일봉상’ 체육경기대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등에 출전, 프로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모두 참가하는 경기도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대회도 개최
- 특히 북한 씨름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평양시와 평안북도의 라이벌 구도, 조선신보는 “씨름경기는 추석을 전후로 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있다”며 “온 나라 인민들이 열중하는 인기 프로이고 사람들은 자기 지방을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소개



- **北체육위원장, 각 종목서 조총련계 대표기용 시사**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박학선 위원장은 “축구뿐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선수들이 조선(북한) 대표로 활약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박 위원장은 9월 2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관계자들과 재일본 조선인체육연합회(체련) 대표단간 면담에서 조총련계 축구 선수들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표팀에서 활약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총련과의 협력,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북한에도 ‘해운대’ 전파돼 당국 검열(9/28, NK지식인연대)**
 - 지난 7월 말 개봉한 후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재난영화 ‘해운대’가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급속히 전파돼 이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28일 주장
 - 이 단체는 ‘주간북한뉴스’ 소식지에서 ‘현지 통신원’의 말을 인용, “14일부터 함경북도에 대한 중앙당 27국 검열이 진행됐다”며 “검열의 동기는 평양시 서평양구역에 위치한 철도대학 컴퓨터에서 한국 영화 ‘해운대’가 발견되면서부터”라고 소개
 - 소식지는 “철도대학 기숙사생들은 9월 5일 오전에 자가생(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최모씨라고 하는 학생의 USB(범용직렬버스 메모리)를 통해 한국 영화 ‘해운대’를 대학 컴퓨터에 옮기고 저녁에 컴퓨터실에 모여 비밀리에 시청하다가 현장에서 대학 정치부의 순찰에 발각됐다”고 소개
 - 소식지는 “통신원에 따르면 ‘해운대’를 담은 USB는 다른 영화를 담은 USB보다 5천원 비쌌고 다운로드 받는 가격도 5천원”이라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관리들, 6자회담은 끝났다(10/4, 연합)**
 - 북한이 9월 말 방북한 미국 전문가 그룹에 6자 회담은 “완전히 끝났다(over and done)”며 6자회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일 밝힘.
 - 이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한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등 미국 전문가 그룹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언,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 이외의 다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소개



● 보즈워스, 北에 협상 재시작 용의 전할것(9/30,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자신이 방북할 경우 북한에 대해 핵협상 프로세스를 재시작(restart)할 용의가 있음을 전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30일 동아시아포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만일 방북할 경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협상 과정을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말할 것”이라면서 “2005년 6자회담 합의에서부터 (협상은) 출발해야 한다”고 밝혀 9.19 공동성명이 새로운 협상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밝힘.
- 그는 “(방북시) 둘째로는 6자회담이 그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6자회담 내의 양자대화”라고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그 목표가 비핵화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와 관련, 그는 “결국에는 필요한 것은 다자적 해법”이라면서 “그 나라(북한)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나홀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장기적 해법으로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면서 “군사적 해법은 없으며, 봉쇄도 장기적으로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협상이 진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
- 그는 또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만으로는 안되며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 형태의 가능성과 결합돼야 한다”고 답변

나. 북·미 관계

● 美, 중동에서의 北확산활동 우려(10/3, 연합)

- 미국은 2일 중동에서의 북한의 확산 활동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이 중동지역을 방문중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범정부 대표단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중이라고 언급
- 미국 대표단은 1일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으며, 4일에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짐. 이번 대표단에는 금융제재를 다루고 있는 재무부에서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포함됐으며, 백악관, 국방부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중동에서의 북한 확산 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면서 “이번 방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전반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



● **美, 北 고립·제재 계속 직면할 것(10/1, 연합뉴스)**

- 미국은 3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고립과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회원국이였다”면서 “그들(북한)이 6자 회담 내 우리와의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이 핵프로그램 포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고립과 상당한 제재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지켜보는 동안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의 적극적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
- 그는 “한반도가 완전하게 비핵화돼야 한다는 우리의 정책은 명확하다”면서 “이는 우리의 정책 및 우리의 6자회담 내 관련국과의 대화의 초석”이라고 강조,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미 양자대화 문제와 관련,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양자 대화 제의가 있었고, 우리는 이를 여전히 평가중”이라고만 답변

● **스타인버그, 北, 양자대화 기회 잡아야(9/30, 연합뉴스)**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0일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협의를 거쳐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자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이 그 기회를 잡는다면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그는 또 “지금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다른 5개 참가국이 공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5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
- 그는 ‘미국의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와 한국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간 한미가 협의해 온 사안으로,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답변

다. 북·중 관계

● **루하오 中공청단 제1서기 방북(10/3, 조선중앙통신)**

- 최연소 베이징 부시장 경력을 가진 루하오(陸昊)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한 중국청년친선대표단이 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 北中 친선 강화가 일관된 입장(10/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은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9월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것은 “중국의 당과 정부가 중조 친선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
 - 신문은 이날 ‘자랑찬 투쟁과 전진의 60년’이라는 개인필명 기념논설에서 “조중 친선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보다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중국 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밑에 새 생활창조와 사회주의 새 중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와 “세기적인 낙후와 빈궁이 청산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변혁이 이룩돼 나라의 면모가 일신됐다”고 중국의 발전상을 지적했으나 그 동력으로 개방·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한 때문이라고 주장

- **김정일, 中 후진타오에 ‘건국’60주년 축전(9/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0일 중국 건국 60주년(10.1)을 맞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중(북-중) 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언급
 - 북한은 축전을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공동명의로 중국의 후 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보냈음.

- **中, 총리 방북시 北에 무상원조(9/29, 연합)**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식량과 석유를 무상원조 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북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다”고 말해 원 총리의 방북 기간 상당한 규모의 무상원조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
 - 장 대변인은 “무상원조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원 총리 방북 기간 북한과 경제 무역, 교육, 여행 분야 등의 협정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

- **北·中, 건국·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9/28,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은 28일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중국 건국 60주년과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대문련)와 북·중 우호협회가 이날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의 인민궁전에서 공동 개최한 리셉션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참가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라. 기타외교 관계

- **북한과 쿠바, 2010년 상품교류의정서 체결(10/3, 조선중앙통신)**
 - 10월 1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북한 정부경제대표단장인 리룡남 무역상과 피델 피게로아 데 라 빠스 쿠바 건설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상품교류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양측은 양국간 경제과학기술협의회 제28차 회의 의정서와 북한 무역성과 쿠바 무역외국투자부 사이의 2010~2015년 가격제정 및 설정원칙 의정서도 조인
- **사르코지, 북한 특사에 자크 랑 임명(10/2, 연합)**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문화부장관을 지낸 좌파의 자크 랑 하원의원을 북한문제 특사로 임명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힘.
 - 엘리제궁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자크 랑 의원이 상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성명은 “랑 의원은 또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랑 의원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된 것은 쿠바와의 대화 재개를 위해 쿠바 특사를 맡은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 랑 특사는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을 방문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일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짐.

3. 대남정세

- **南, 귀순의사 확인, 송환불가 통보(10/4, 연합)**
 - 북한 당국이 10월 1일 동해 상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1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우리 당국은 전원 귀순의사를 밝혔으며 불가 입장을 통보, 북측은 2일과 4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주민 11명의 송환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전원 귀순의사를 밝혔으며 확인이 필요하다면 하라’는 취지로 ‘불가’ 입장을 4일 북에 통보
 - 이들 11명은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제3국을 거쳐 들어온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합동조사, 하나원에서의 국내 정착교육 등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 **어린이 2명 포함 北주민 11명 동해로 귀순(10/1, 연합)**
 - 북한 주민 11명이 1일 오후 6시 30분께 동해로 귀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성인 9명과 어린이 2명 등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상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은 우리 측 항구에 도착, 귀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힘.
 - 귀순자는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오후 6시 30분께 3t 규모의 ‘전마선(傳馬船.소형 고기잡이 배)’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왔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 그는 “1차 합동신문 결과, 이들은 함경북도의 한 지역에서 출항해 100여 마일 이상의 동해 먼 바다로 나간 뒤 남측으로 넘어왔으며 1년가량 탈북을 준비한 것 같다”면서 “9명은 일가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 군 육상레이더 기지에서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이들의 접근 사실을 포착, 해경에 통보했으며 해경은 4시 15분께 북한 선박에 접근해 귀순의사를 파악하고 강원도 주문진항으로 안전하게 유도한 뒤 양양 해군기지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개성공단 업체 실태파악에 적극적(10/1, 연합)**
 - 북한이 9월 중순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회계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입주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전례없이 적극적인 태도로 공단 업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입주업체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선 북한 당국이 업체들의 어려운 부분을 파악해 도움을 주려는 태도라는 평가와 나중에 임금 인상 요구자료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 제기로 반응이 엇갈림.

- **이산상봉 마지막날, 상봉단 오후 귀환(10/1, 연합)**
 - 약 1년 11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일 2차 상봉단의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
 - 남측 상봉단 429명은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의 추석 이산상봉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1시 금강산을 출발, 동해선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 이들은 첫날인 29일 단체상봉과 만찬, 이틀째인 30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야외상봉 등으로 60년간 쌓여온 한을 달랬음.
 - 앞서 9월 26~28일 1차 상봉행사에선 남측 97가족, 126명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6차례 북측 가족 233명과 상봉

- **北매체, 추석 남북이산가족 상봉 보도(9/26-2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이산가족 추석상봉 소식을 전언



- 방송은 28일 오후 1차 상봉이 끝난 뒤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26일 남측 상봉자들과 집체(단체)상봉을 했다”며 “상봉이 시작되자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은 수십년 세월 한시도 잊은 적 없던 혈육들을 만나 뜨겁게 인사를 나누고 가정 소식도 전했다”고 소개
- 방송은 이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9월 26일 환영만찬을 주최한 사실과 27일 이산가족들이 가족별 상봉을 한 사실을 전하고 “생사 여부조차 모르던 혈육들을 만난 기쁨속에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김정일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복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참된 삶을 누려온 나날들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했다”며 체제선전에 활용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관리들, 6자회담은 끝났다” <교도> (10/3)

- 북한이 지난달 말 방북한 미국 전문가 그룹에 6자 회담은 “완전히 끝났다(over and done)”며 6자회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일 밝힘. 이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한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등 미국 전문가 그룹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 이외의 다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함. 북한 관리들의 이같은 언급은 북·미 간 양자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루이스 교수와 다른 미 전문가들을 통해 워싱턴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려 한 것으로 보임. 루이스 교수는 올 2월에도 핵군축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연구소 공동소장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바 있음.

● 스타인버그 “김정일 전략적 결정 내려야” (10/1)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핵 해법과 관련, “우리는 준비돼있다”며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포기하는게 북한을 번영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은 전략적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 그는 “우리는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 철회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종결하자는 제안은 전혀 없다”고 밝힘.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우리는 단호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어제 베이징에서도 결의 1874호 이행문제를 논의했으며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철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거듭 강조함.
- 그는 또 이란 핵 논란과 북핵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크게 영향을 준다. 북한에 단호하지 못하면 우리가 핵확산을 묵인한다는 신호를 전세계에 줄 수 있다”며 “북한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 비확산



체제와 관련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과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패키지’ 방안에 대해 “두 방안은 동일하다”며 “뭐라고 부르던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데 한·미간은 물론 다른 6자회담 참여국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함.

● “中 동참없는 대북제재 효과 미미” <美전문가>(10/1)

- 북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오는 4~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결과를 눈여겨보고 있음. 북한의 맹방인 중국의 최고위 인사의 방북이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 외교전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최근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양자 또는 다자대화 참가용의’ 언급을 밝힌 바도 있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8일 “최근의 몇 개월의 중요한 상황진전은 중국의 결정때문”이라고 밝혀 북핵 국면 전환의 고비에는 중국의 역할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트(CATO) 연구소가 30일 미 의회에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음. 테드 케일런 카펜터 케이트 연구소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다시 도래했을 때 북한은 안전보장, 경제적 보상 등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시각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함.
- 그는 “올해 들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 2차 핵실험, 최근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주장 등으로 이러한 견해에 대한 비관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는 중국에서도 비슷하다”고 말함. 그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자신의 두 차례 중국 방문시 달라진 중국 학자, 언론인들의 분위기를 전하며 “올해 방문했을 때 상당수 중국 학자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 역지력을 가지려고 하고 동북아의 ‘파키스탄’이 되려 한다는 인식들이었으며, 북한이 향후 수년내에 수십개의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함.
- 그러면서 카펜터 부소장은 북핵저지를 위한 제재국면에서 대북 식량, 에너지 지원 등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은 주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오랜 동맹을 ‘배신’ 하지 않겠다는 대의명분도 있지만 북한체제가 흔들릴 경우 자국 이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실리적 이유도 있다고 그는 분석함.
- 그는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대북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김정일은 이제 잃을 게 없다는 판단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택해



침에도 권 차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매우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며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길로 나아가는 기회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 그는 ‘미국의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와 한국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이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간 한·미가 협의해 온 사안으로,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답함. tm타인버그 부장관은 앞서 권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공고한 동맹”이라며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힘.
- 권 차관은 “한·미 양국은 정상에서부터 여러 레벨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그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회담에서 한·미는 안보리 제재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해 외교적 해결 도모하지는 접근방식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함.
- 그는 또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내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음.
- 권 차관과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회담에서는 이 밖에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역 이슈, 미래동맹 비전선언 이행과 한·미동맹 재조정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짐.
-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순방에는 조 도노반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와 성 김 6자회담 특사, 대니얼 러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담당 보좌관, 데릭 미첼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 등 미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동행하고 있음.

● “北, 핵협상중엔 핵무기포기 불가 입장” <美전문가>(9/30)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제재-대화’ 병행엔 북한도 ‘핵강화-대화’ 병행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력프로젝트 국장이 주장함.
- 3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시걸 국장은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함. 시걸 국장은 이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과 핵보유국으



로 인정받는 일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음.

- 그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해 핵무기부터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북한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면서 “북한은 협상을 통해 우선 대미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분석함. 그는 특히 “북한이 협상기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은 우선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미·북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RFA는 전함.
- 그는 또 북한이 내달초 방북하는 원자바오 중국총리에게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과 여러차례 양자대화를 통해 이들 나라의 진정한 의도를 살핀 후 예나 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을 붙일 것이라고 예상함. 한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고 있으나, 핵보유국 인정 문제 등에 대해 북한과 미국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 힘들 것이라고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전망함.
-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도 “이번 순방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로 논의할 것이지만 대북 제재관련 이견 때문에 의견 조율이 힘들 것”이며 그 때문에 “6자회담 재개가 계속 지연될 것이고 내년에도 6자회담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보즈워스 “北에 협상 재시작 용의 전할것”(9/30)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자신이 방북할 경우 북한에 대해 핵협상 프로세스를 재시작(restart)할 용의가 있음을 전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이달 초 한국, 중국, 일본을 순방했던 보즈워스 대표는 덴마크 정부의 아시아정책 선임고문으로 활동중인 요나스 파렐로-플레스너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함.
- 보즈워스 대표는 30일 동아시아포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만일 방북할 경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협상 과정을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말할 것”이라면서 “2005년 6자회담 합의에서부터 (협상은) 출발해야 한다”고 밝혀 9.19 공동성명이 새로운 협상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밝힘. 그는 “(방북시) 둘째로는 6자회담이 그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전함.
- 그는 ‘북한과의 양자대화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양자대화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언급하기가 너무 이르다”면서 “외교적 노력의 결과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6자회담 내의 양자대화”라고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그 목표가 비핵화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 그는 “결국에는 필요한 것은 다자적 해법”이라면서 “그 나라(북한)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나홀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장기적 해법으로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면서 “군사적 해법은 없으며, 봉쇄도 장기적으로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협상이 진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함.
- 그는 또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느냐’ 는 질문에 “그것만으로는 안되며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 형태의 가능성과 결합돼야 한다”고 답함. 특히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중 김정일을 만날 것으로 보느냐’ 는 질문에 “모르겠다”면서 “만일 그런 회담이 열린다면 그것은 북한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시사할 것”이라고 언급,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음.
- 이 밖에 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다자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자임을 거듭 지적함. 또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일관되게 얘기해 왔다”면서 “양자대화의 목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美합참부외장 “北 고정식발사체계 취약”(10/3)

- 미국의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은 북한과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체계는 모두 지상의 공개된 고정식 발사대 방식이기 때문에 “초보적”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발사 전에 선제공격을 통해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음.
-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지난 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의 하나는 북한이 고정식 발사체계에서 이동식 발사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카트라이트 부의장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미 국방부의 패트릭 오라일리 미사일방어 국장은 2010년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는 알래스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美북한인권대사, 보즈워스팀서 활동”(10/3)

- 미국은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를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주도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며 킹 대



사가 북·미 양자대화에 실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이는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 외에 미사일 문제는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정부 소식통은 3일 “킹 대사는 보즈워스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북·미 대화에도 북한 인권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상대표로 누구를 참여시키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국의 권리”라고 말함. 이 소식통은 “하지만 실제 협상에 북한 인권대사가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함.

○ “北, 영변 핵단지 평화적 이용방안 제안”(10/2)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하더라도 실험용 원자로는 남겨둬 평화적 연구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짐. 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북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공개함.
- 그는 영변 핵시설의 평화적 연구센터 전환 방안은 지난해 북한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소개함.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하는 대신 러시아형 실험용 원자로를 그대로 두고, 이를 개조해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겠다는 방안이라는 것임. 그는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재처리시설)을 해체하는 조건이면 이런 방안도 북한의 비확산체제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함.
-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로드맵이 필요하며, 우선 1단계로 북한 핵의 완전 제거보다는 핵 추가개발과 확산을 중단시키고 점진적으로 핵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평화적 연구센터 전환 외에 ▲평화적 목적의 북한의 원자력 이용권 인정 ▲정치적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군사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및 경제·에너지 지원, 인적 교류 등의 인센티브(유인책)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힘.
-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권은 북한을 비확산체제로 복귀시키는 조건하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미국의 북한 주재 연락사무소 설치 및 남북한 및 미·중 4자간 평화선언도 가능하다는 것임. 그는 군사적 측면의 상호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북·미 양측의 군 의료·기술진의 교류나 심포지엄 개최 등도 가능하며, 북한 오케스트라의 미국 공연 등 민간 교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
-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완전한 핵폐기를 하는 비핵화 2단계에서는 북·미 양측간에 핵폐기 일시 등의 이정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함. 그는 완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 및 에



너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망함. 다만, 대북 경수로 제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는 안된다면서 먼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경수로 1기에 해당하는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함.

- 이 밖에 그는 미국 정부가 핵은 물론 ▲미사일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인권개선 ▲위폐제조 등 불법활동 근절 등 5대 분야의 대북 협상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정권교체-권력투쟁 등 광범위 대북시나리오 검토”(9/30)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외교,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광범위한 대북 시나리오를 미군 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 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함. 이는 미국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각종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임.
- 샤프 사령관은 이런 가정적인 상황을 통해 무언가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단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대부분의 시나리오들은 외교적인 것이지만 군사적 측면도 있다고 전함.
- 샤프 사령관은 이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진에 대한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한쪽 팔이 일부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함.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김 위원장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 그는 김 위원장이 건강 악화설이 불거진 지난해보다 올해 훨씬 공개적인 대외 활동이 많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가 통치를 하고 있으며 괜찮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함. 그는 다만 김 위원장이 1년 반 전보다는 훨씬 야위어 있다고 전함.
-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운에 대한 권력 승계 문제와 관련, 권력을 넘겨받았다는 암시는 없지만 “일부 후계육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이뤄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이어 북한이 한국군과 미군을 상대로 재래식전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전 또는 길가에 매설된 급조폭발물 (IEDs) 등을 활용한 공격 및 미사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함.
- 그는 “북한이 정상적이고 전통적 의미의 전면전에서는 이길 수 없다



는 것을 아마 깨닫고 있을 것”이라면서 “비전통적이거나 비대칭적인 위협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 구체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및 8만명의 특수군 개선에 돈을 집중하고 있다면, 특히 특수군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세력이 활용중인 길가에 매설된 급조폭발물 공격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동시에 그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있는 북한의 포대가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입했다고 소개함. 그는 또 한국이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 사이버 안보를 담당할 본부를 설치했다는 점도 전함.

● 北 “美의 대북 핵정책과 연계 비핵화 노력”(9/30)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과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날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없는 세상’ 건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결의 1887호에 대해 “전반적 국제사회의 염원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중기준적인 문건”이라는 이유로 “전면 배격하며 거기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을 것”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함.
- 그는 안보리 결의 1887호의 채택과 관련,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비핵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그로 인해 “평화와 안정이 심히 유린,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부터 그것을 감축하고 철폐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함.
- 이어 그는 “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 대국들의 일방적 요구들만 열거되어 있는 이번 결의는 세계 비핵화의 간판 밑에 핵독점에 의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 보려는 핵열강들의 음흉한 책동”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를 핵무기 보유에로 떠민 근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핵무기 포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그는 특히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전방 전개와 가중되는 핵위협을 막는 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에 악용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북한이 “비핵국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함.

● UNDP, 평양서 대북사업 재개식 열어(9/30)

- 지난 2007년 3월이래 중단됐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이 재개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통신은 “조선에 대한 유엔개발계획의 협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과 관련한 행사가 30일



주조 유엔개발계획 대표부에서 진행됐다”고 말했으나 재개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UNDP 집행이사회는 지난 1월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자금전용 의혹때문에 2년반 가까이 중단돼 온 대북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었음. UNDP는 1981년부터 북한에서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음.

● 北 “대화엔 대화, 제재엔 핵억제력 대응”(9/29)

-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박 부상은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화에는 대화로, 제재에는 핵억제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힘.
- 북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병행하면서 대화에 나설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6자 회담 재개 전 북·미 양자 대화를 위한 의견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그는 또 “우리의 핵무기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 헌장에 규정된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재는 결코 인정되지도 접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박 부상은 “미국이 핵 정책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직한 핵 보유로 지역의 핵 균형을 보장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으며, 미 행정부가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고 최근에 여러번 천명하대로 변화의 입장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핵 억제력만 보유할 것”이라며 “유럽과 기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에서도 위협과 억제력은 정비례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함. 최근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북과 남 사이에는 유엔 총회가 인정하고 지지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겨 서로의 관계에서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김정일 장군의 결단에 의해 북남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함.
- 그는 “개성공업지구 운영 등 북남 경제협력이 다시 제 궤도에 들어서게 되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았음. 유엔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를 “가장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기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비상임이사국 수를 확대



하고 주권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의 결정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침해 시정 요구와 관련해서도 “특정 나라의 제도를 문제시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인민의 제도선택권을 부정하는 인권 침해”라면서 “서방과 유럽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작은 나라들의 인권만 트집 잡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함.

● 美 그레이엄 목사家 보좌역 방북(9/29)

- 미국의 저명한 부흥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보좌역이 28일 방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중앙통신은 “미국 목사 프랭클린 그레이엄의 특별보좌관 멜빈 리 치담 일행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으나 이들의 방북 목적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음.
- 치담은 2006년 8월에도 방북, 아들 그레이엄 목사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고 그레이엄 목사는 2008년 7월 북한을 방문함. 따라서 이번에도 그레이엄 목사의 방북 일정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아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2008년 세 차례 방북했으며, 특히 아버지 그레이엄 목사는 1992년 4월 방북해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전달하는 등 그레이엄 목사 부자는 북한과 미국 양측 지도부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음. 당시 김일성 주석은 아버지 그레이엄 목사에게 “나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해한 첫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오바마 “北 새방향 가도록 압박 계속”(9/2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올해 초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중단하도록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이런 언급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은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연설에서 이번 주 열린 유엔총회 결과 및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비확산 책임 준수를 거듭 촉구함.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을 전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우리들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제2 우라늄농축 시설 논란이 불거진 이란 핵문제와 관련, 국제 비확산 체제의 심각하고 긴급한 위



협으로 규정하고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지 고립에 직면할지를 이란 지도부가 선택하라고 요구함.

- 그는 “이 문제를 진지하고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풀자는 내 제안은 열려 있지만,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완전히 협력해야 하며 평화적 의도를 증명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함.

다. 중·북 관계

● 北-中, 경제원조 교환문서 등 조인(10/4)

- 북한과 중국 정부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등 다양한 협정과 합의문, 의정서, 양해문 등에 조인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날 조인된 합의문엔 ‘경제원 교환문서’ 외에 ‘조약정리 의정서’, ‘경제기술협조협정’, ‘교육기관간 교류협조 합의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교류·협조 양해문’, ‘국가품질감독기관 사이의 수출입품 공동검사 의정서’,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야생동물보호협조 강화 합의서’ 등이 있음. 중앙통신은 그러나 이들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김영일 총리와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 박경선 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대사 등이 참석했음.
- 중국측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와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 상무부장, 차이우 문화부장, 셰푸잔 국무원 연구실 주임, 추샤오슝 총리실 주임,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류전치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등이 참석했음.
- 합의문 서명은 북측에서 박 외무상과 김영진 교육상, 한우철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장, 박성국 국가품질감독국장, 강철수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 리성욱 국가과학원 부원장 등이, 중국측에서 양 외교부장, 천 상무부장, 류샤오밍 주북 중국대사, 왕영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장, 왕즈파 국가여유국 부국장이 각각 해당문건들에 했음.

● 北매체, 원자바오 서면 도착성명 보도(10/4)

- 북한 언론매체들은 4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평양 공항에서 ‘평양도착 서면연설’을 발표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음.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원 총리가 성명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해서 조선인민에 대한 중국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인방인 조선을 공식친선 방문한다”며 “중국 당과 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선 당과 정부, 조선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 원 총리는 또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으며 중조친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중조 선린우호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이들 매체는 밝혔다. 이어 원 총리는 “올해는 중조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해이며 ‘중조 친선의 해’”라면서 “이 기회에 중국 측은 조선측과 함께 중조 친선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큰 기여를 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음.
- 원 총리는 또 “방문기간 중조관계와 쌍방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번 방문이 중조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강화와 쌍방사이의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촉진하며 중조 선린우호협조 관계발전을 추동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들 매체는 소개했음.

● 北김정일, 中원자바오와 공연 관람(10/4)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대극장에서 방북중인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가극 ‘홍루몽’을 관람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전했다. 이 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온가보 동지와 함께 4일 평양대극장에서 가극 홍루몽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음.
- 홍루몽은 북한의 피바다가극단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1960년대 상연됐던 작품을 ‘재창조’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지도하기도 했다고 북한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원 총리는 공연에 참가한 피바다가극단에 화환을 전달했음.
- 공연 관람에는 원 총리를 수행한 중국 대표단과 북측에서 김영일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 대사 등도 참석했음.
- 공연 관람에 앞서 원 총리는 김영일 총리와 함께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음.

● 北김영일 “양자·다자 핵협상 용의”(10/4)

- 김영일 북한 총리는 핵문제 논의를 위한 양자, 다자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4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밝혔음.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김영일 총리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무기 활동’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김 총리는 “비핵화 실현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면서 “북한은 다자 및 양자대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원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이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음. 양국 총리는 이날 총리회담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더욱 긴밀한 발전을 다짐했음. 회담 후 두 총리는 경제, 무역, 교육, 여행 등의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협정서에 서명했음. 중국신문사는 양국이 국경지역인 압록강변에 새로운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정식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음.

● 北中 총리회담..협력협정서 서명(10/4)

- 김영일 북한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4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협정서에 서명했음.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북한을 방문 중인 원 총리가 이날 오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 총리와 회담을 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음.
- 이와 관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달 29일 원 총리가 방북 기간 북한과 무역, 교육, 여행 등의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김정일, 원자바오 공항서 영접(10/4)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평양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 북한 매체들은 원 총리가 북한의 노동당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의해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하고, 특히 김 위원장이 평양비행장에서 원 총리를 “따뜻이” 영접했다고 밝혔음.
- 김 위원장이 1998년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래 외국 귀빈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국한됐으며, 중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든 총리의 방북을 공항에서 영접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음. 북한 신문과 방송들은 이날 사설 등을 통해 원자바오 총리를 “귀중한 친선의 사절”로 “열렬히 환영”한다며 그의 방북이 “조중(북중) 친선의 역사에 새



로운 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음.

- 공식 환영식이 열린 공항에선 김 위원장 외에 북한의 당·군·정 고위 간부와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 북한에 체류하는 중국인 및 중국 유학생들이 원 총리를 맞았음.
- 원 총리의 방북에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차이우(蔡武) 문화부장, 셰푸잔(謝伏瞻) 국무원 연구실 주임, 추샤오슝(丘小雄) 총리실 주임, 6자 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류전치(劉振起)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등이 수행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 中, 총리 방북시 北에 무상원조 시사(9/29)

-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방북하면서 북한에 상당 규모의 무상원조를 할 것임을 시사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식량과 석유를 무상원조 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북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다”고 말해 원 총리의 방북 기간 상당한 규모의 무상원조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함.
- 장 대변인은 “무상원조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원 총리 방북 기간 북한과 경제 무역, 교육, 여행 분야 등의 협정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함. 원 총리는 내달 4~6일 북한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양국 수교 60주년 및 교류의 해 기념행사에도 참석함.
- 장 대변인은 원 총리가 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를 직접 거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각 당사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함. 그는 “중국은 각국이 노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함.
- 장 대변인은 또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해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함.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핵폐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협상 재개에 돌파구를 열 중대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라. 기타

● <軍, 北 귀순선박 ‘식별’ 지연>(10/4)

- 군 당국은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동해 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전마선을 탐지했지만 확인 요청은 약 2시간 30분이 지



- 난 후에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음. 또 북한 주민을 태운 전마선은 북한군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함경북도의 한 항구를 출발해 250여km 떨어진 공해까지 나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음.
-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1명이 승선한 3t짜리 전마선(소형 고기잡이배)은 지난달 27일 밤늦게 북한을 출발, 북한 육상과 경비정의 레이더를 피해 동남방 250여km 지점까지 항해하다 다시 서남방으로 선회해 남측 영해로 진입했음.
 - 이 소식통은 “북한 전마선은 고기잡이 어선을 가장해 밤늦게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북한군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육지에서 최대한 멀리 항해하다 다시 우리 영해로 들어왔다”고 말했음.
 - 군 관계자는 “북한 선박은 해군 경비정의 레이더망 거리의 2배 이상 돌아서 들어왔으며 해군 경비정은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경계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공해를 통해 멀리서 돌아들어 오는 배를 100% 감지하긴 어렵다”며 “선박이 지상 레이더망 범위내에 들어섰을 때 육군이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선박은 당초 알려진 시간보다 24분 정도 앞선 오후 3시22분께 강릉 앞바다에서 육군의 강릉기지 레이더망에 포착됐으며 군은 이를 ‘미식별 선박’으로 분류해 즉각 해경에 통보하는 동시에 항로를 계속 추적했음. 하지만 군은 해당 의심 선박에 대한 확인 요청은 하지 않고 배의 모양 등을 감안해 이를 근방에서 조업하던 우리 측 선외기(모터가 외부에 장착된 선박) 어선 중 하나로 판단해 ‘해당 해역에 선외기가 모두 몇 척이냐’고 물었고 해경은 ‘7척의 선외기 선박이 있다’고만 통보했음.
 - 이기식(준장) 합참정보작전처장은 “육군이 해당 선박을 포착한 뒤 미식별 선박으로 분류해 추적하는 동시에 선박의 모양 등을 분석해 남한 선외기 선박으로 판단, 해경에 선외기 선박의 현황을 문의해 ‘7척이 남아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음. 이후 전마선은 강릉 앞바다에서 주문진 앞바다 쪽으로 해안선에 근접하면서 북상했고 군은 인근지역 부대로 이를 전파하면서 계속해서 추적했음.
 - 군은 전마선이 계속해서 북상하자 오후 5시50분께 해경에 해당 선박에 대한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 주문진 해역에 해경이 출동, 귀순 북한 어선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문진항으로 유도했음. 이에 앞선 오후 6시 1분께 의심 선박에 대한 주민 신고가 주문진 해경파출소와 군에 들어왔고 해경 측은 “우리도 육안 식별해 순찰선을 출항시켰으니 확인 뒤 알려주겠다”고 답했다고 군은 밝혔음.
 - 북한 선박이 주문진 해안 300m까지 근접할 때까지 우리 군이나 해경의 검문·검색이 전혀 없었던 데 대해 군은 “군 레이더 탐지범위 밖에서 그 범위 내로 선박이 진입하면 미식별 선박으로 분류하는데, 애초 군 레이더에는 북한 선박 외에 여러 척의 미식별 선박이 있었고, 이 경우 선박 가까이 군·해경 함정이 있으면 검문을 하지만 다수는 추적을 하면서 항구에 들어온 뒤 해경이 최종 식별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미식별 선박이 이상행동을 보이면 선박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북한 선박은 다른 배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항해를 했으며, 당시 이동속도는 9km 안팎이었다”며 “간첩선의 경우 속도가 빠르거나 우리 선박을 회피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데 이런 경우 선박 주의보를 내려 최단시간 내에 식별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음.
-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귀순 북한 선박이라 해도 해안 코앞까지 올 때까지 전혀 검문·검색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군과 해경의 의심선박 식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 北 ‘베트남전참전자 대표단’ 베트남방문 눈길(10/4)

-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자 대표단이 베트남 방문을 위해 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북한의 대외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보도했음. 평양방송은 3일 “웬남(베트남)을 방문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공훈장사인 정규함 조선인민군 중장(우리의 소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웬남전쟁참가자 및 열사 가족 대표단이 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 또 공항에는 레 반 크 주북 베트남대사와 대사관 무관 등이 나와 대표단을 전송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북한은 지난 2001년 7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이 베트남전 때 전투기 조종사들과 함께 상당량의 군수물자도 북베트남군에 지원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을 처음 공개 시인했음. 그러나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자와 당시 전사자의 가족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한 사례는 이제까지 보도된 적이 없어 이번에 참전자 대표단의 베트남 방문은 북한과 베트남간 관계 및 베트남의 대남, 대북정책과 관련해 눈길을 끄.
-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2년 한국과 수교할 때부터 한국이 미국을 도와 베트남전에 참전한 문제에 대해선 “과거는 과거”라며 거론하기를 피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내세워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번에 자신들을 도왔던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자 대표단을 받아들인 것임.
-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은 지난 2000년 3월 말 베트남을 방문한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북한군 묘지를 참배함으로써 처음 확인됐고, 이곳에 있던 북한군의 유해는 2002년 9월 북한측에 인계돼 ‘인민군 영웅 열사묘’에 묻혔음. 2001년 7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은 1965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4차회의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이뤄졌음.
-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선 첫 의안으로 ‘웬남을 지원하는 문제’를 상정하고 “조선 인민은 웬남 인민에게 물질적 및 정신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그들이 요청한다면 지체없이 지원군도 파견할 것”을 결정했음. 이어 1966년 10월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선 ‘피’로써 베트남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방송들은 설명했다. 당시 북한이 북베트남군 지원을 위해 파견한 전투기 조종사는 20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별도로 100여명의 심리전 요원과 땅굴 전문요원을 파견했고, 이 가운데 조종사 12명, 땅굴요원 2명 등 모두 14명이 전쟁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인도해군, 북한선박 억류(10/4)

- 인도 해군이 남부 케랄라주 수역으로 들어오려던 북한 선박 한 척을 억류했다고 인도 국방부 소식통들이 4일 전했다. 이 선박이 어떤 종류인지, 왜 인도 해역에 접근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음.

● 佛 대북특사 자크 랑, 6-11일 한국방문(10/2)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임명된 자크 랑 의원이 6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함. 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랑 특사는 4일부터 이틀 간 일본을 방문한 뒤 6일부터 엿새 동안 한국 방문 일정에 들어감. 한국 방문 기간에 누구를 만날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양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랑 의원은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앞으로 6자회담 당사국을 잇따라 방문해 각국의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랑 특사가 북한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 이에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1일 야당인 좌파 사회당 소속의 랑 의원을 북한문제를 전담하는 특사로 임명함. 엘리제궁은 “프랑스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자크 랑 의원이 상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 美, 미얀마에 ‘北협력설’ 우려 전달(10/1)

- 미국은 29일 이뤄진 미얀마와의 양자대화에서 북한과의 ‘핵협력설’ 등 ‘북-미얀마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한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연합뉴스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뉴욕에서 전날 이뤄진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우 타웅 과학기술부 장관 등 미얀마 대표단간의 첫 직접대화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함.
- 이 당국자는 “북한과 버마(미얀마)간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런 우려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고 말함. 그는 북한과 미얀마간의 핵협력설도 논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어떤 나라와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해 왔다”면서 부인하지 않았음.
- 그는 “동시에 캠벨 차관보가 밝혔듯이 버마는 최근 북한 화물선 문



제와 관련한 건설적 역할을 했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모두 했다”고 언급,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이행과 관련한 미얀마의 협력 문제도 논의됐음을 시사함.

- 이와 관련, 캠벨 차관보는 이날 미얀마 문제를 다룬 상원 외교위 소위 청문회에 출석, “소화기(small arms)와 군사장비 공급 등 우리를 우려케하는 북한과 버마간의 일부 조치들을 우리는 봐왔다”면서 “그런 협력이 금지 영역으로 확장한 일부 조짐이 있다”고 공개적 우려를 제기함.
- 그는 “(미얀마와의) 대화 초기에 우리의 우려 사안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이 제재를 풀거나 완화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력설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대(對)미얀마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밝힘.
- 그는 민주주의, 인권 및 ‘핵협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들과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가 명확히 연계될 것이라고 말함.
- 캠벨 차관보는 버마와의 직접 대화 추진 배경과 관련,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민감한 기술과 모든 재래식 무기들과 관련한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관련, 버마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제기되는 우려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설명함.
- 그는 “우리는 비확산 우려들 및 버마의 북한과의 밀접한 군사관계를 (향후 대화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버마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마와 북한간의 관계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말함. 그는 “직접 대화를 통해 버마 지도부의 의도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앞서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미-미얀마 양자대화과 관련, “버마와 북한간의 관계, 이와 관련된 비확산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그는 이번 대화를 “예비 협의”라고 성격을 규정하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 문제와 민족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전함.

● 伊 기업, 北 조선컴퓨터센터 등과 제휴(9/30)

-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시에 소재한 두 회사가 북한의 대표적인 정보 기술(IT) 연구개발 기관인 조선컴퓨터센터(KCC) 등과 인력 교류 및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수출 등을 위한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레푸블리카가 30일 보도함.
-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정보통신 기술 전문업체인 쿠오타제로(QuotaZero)와 엘레롬(Elerom) 등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북한 KCC 등과의 상호 협력을 추진해 오다 올해 초 계약서에 서명했고, 최근 북한의 IT 기술인력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면서 프로젝트 실행에 들어감.



- 소프트웨어 업체인 쿠오타제로의 리카르도 메린폴로 사장은 “북한의 기술자 대표단이 최근 이탈리아로 오면서 본격적인 공동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들을 일정기간 교육시킬 예정이며 그 중 4명은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메린폴로 사장은 또 “2010년 초부터 10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 구성해 2단계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KCC 소속 IT인력과 함께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또다른 업체인 엘레룸은 KCC와 무역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박람회 개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임. 이탈리아 기업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다른 IT기업 신지와 온라인 교육(e-learning)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합작사업도 동시에 추진중이라고 레푸블리카는 전함.
- 엘레룸의 베르토네 사장은 북한에서 미래 공동사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으며 “북한 IT기업들은 미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자유시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함. KCC는 북한 IT 개발의 메카로 리눅스 운영체제 분야에 상당한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온라인 바둑프로그램 ‘은별’의 개발업체로 알려져 있음.

● 베트남, 北에 쌀지원..北매체 잇단 ‘지원’보도(9/28)

- 베트남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중앙통신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에서 조선(北)에 보내는 쌀이 28일 남포항에 도착했다”며 “베트남 정부는 조선에서 자연피해와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 식량을 기증했다”고 밝힘.
- 실제로 베트남은 지난 2007년 10월엔 외교부를 통해 수해를 입은 북한에 5만달러 상당의 지원물자를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02년 6월에는 5천t의 쌀을 지원하기도 함. 이에 앞서 지난 25일엔 러시아가 지원하는 식량이 라선항에 도착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잇따라 ‘실시간’으로 적극 공개하고 나선 것은 식량지원을 바란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됨.
- 북한은 핵문제와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이 고조되던 지난 3월엔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했으나, 최근 북·미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 가능성에 대비, 이미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닝 박사가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5일 보도함.
- 실제로 북한의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26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을 위해 방북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상봉은 북에서 특별히 호의를 베풀



등 남북관계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 “북핵 문제와 분리된 문제는 아니지만 남북교류협력의 긍정적 에너지가 북핵 정책의 엄정함을 손상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합참부위원장 “北 고정식발사체계 취약”(10/3)

- 미국의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은 북한과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체계는 모두 지상의 공개된 고정식 발사대 방식이기 때문에 “초보적”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발사 전에 선제공격을 통해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지난 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의 하나는 북한이 고정식 발사체계에서 이동식 발사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카트라이트 부의장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미 국방부의 패트릭 오라일리 미사일방어 국장은 2010년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는 알래스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설명했다는 방송은 전함.

● “한·미, 北 급변사태 공동대책 마련”<RFA>(10/2)

- 한국과 미국 양측은 지난 8월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함.
- RFA는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4일과 5일 하와이의 이스트웨스트 센터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양국 간 세부적인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고 밝힘.
- 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외교교통상부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관계자 12명이, 미국 측에서 성 김 6자회담 대표를 단장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한 미군, 에너지부의 당국자 12명이 각각 참석했다고 이 방송은 소개함.
- 소식통은 “미국과 한국이 2008년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친 외교 당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한 것은 지난 8월 비공개회의가 처음”이라고 설명함.



- RFA는 “회의에서 다룬 내용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나 정권교체 등에 따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양국의 대응 원칙과 협력 분야”라며 “미국과 한국은 급변사태의 대응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긍정적인 협조를 유도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밝힘.
- 이 방송은 “이를 위한 협력 분야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경보체제를 수립하고, 대량 탈북 사태에 대처하는 방안도 양국이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며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빠른 시간 내에 통제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청용화 “내년 한국 G20 정상회의 전폭지지”(9/30)

- 청용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30일 “중국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청 대사는 이날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G20 회의 가동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핵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함.
- 청 대사는 북한 후계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중국의 외교정책 원칙은 ‘평화공존’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함. 그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언급, “양국무역 불균형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FTA 체결에 걸림돌이긴 하다”면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얻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FTA를 빨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
- 청 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 “최근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계속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각국은 마땅히 경기부양책을 계속해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중, ‘그랜드 바겐’ 집중 협의(9/29)

- 한국과 중국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 구상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상하이 서교(西郊)빈관 호텔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함.

- 이 당국자는 “중국측은 그랜드 바겐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5자간에 충분히 협의됐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돼있으며 앞으로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함.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방한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에게 그랜드 바겐 구상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짐.
- 회의에서 중국 측은 “그랜드 바겐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나가지”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두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50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면담하고 북핵 해법에 대해 중점 협의함.
- 두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핵 보유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을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기로 했다고 당국자들이 전함.
- 양측은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다뤄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한·중간 공통된 이해와 이익에 기초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함.
- 이와 관련, 외교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중국의 전략과 이해가 한국과 공통돼 있다는 입장은 확인했다”며 “과거 (중국 내) 일부 사람들이 북한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안정을 바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제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중·북 관계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인식들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함.
- 중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과 관련, 현시점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외교 당국자는 “원자바오 총리가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간에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며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에 대해 낙관적 전망은 아니지만 기대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중국측은 내년 한국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외교 당국자는 “양측이 G20 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의제설정과 준비과정에서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함.



- 회의에서 한국측은 2012년 개최 예정인 여수 엑스포와 관련, 중국이 조기 참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측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함. 또 한국측은 중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 통상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힘.

다. 한·일 관계

● **李대통령-하토야마 日총리, 9일 정상회담(10/3)**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 청와대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하토야마 총리가 9일 하루 일정으로 방한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및 지역정세, G20(주요 20국)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하토야마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달 16일 총리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차원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함.
-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의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임.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안과 함께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또 한국의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와 함께 일왕의 방한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해외 방문을 방한으로 택한 것은 하토야마 신정부의 한·일 관계 중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일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국함.

● **柳외교, 하토야마 日 총리 방한 요청(9/30)**

- 일본을 방문 중인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낮 총리실을 방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면담을 갖고 조기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함. 유 장관은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으로 우정을 깊게 하는 동시에 각료급에서도 관계를 긴밀히 하고 싶다”고 민주당 정권과의 유대 강화에 기대를 표시하면서 조기 방한을 요청함.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한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함.
-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 언론은 그가 오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기 전인 9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일본 정부는 이날 중 하토야마 총리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이날 면담에서 유 장관은 “민주당 새 정권에서도 새로운 한·일 협력 시대를 기대한다. 마음을 열고 계속 협력해 나가자”며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한다고 한데 대해 상당히 기대한다. 한·일 간 모든 문제를 협력해 나가자. 양국 정상 간 서틀외교도 강화하자”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전함.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은 한·일 정상 간 빈번한 만남을 통해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한·일 간은 물론 아시아, 국제 문제에서도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함.

- 유 장관은 “하토야마 총리의 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도 대화해 나가자”고 말한 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뉴욕에서 제기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미·일간에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함.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공감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인접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연대해 나가자. 신뢰를 구축하자”고 거듭 신뢰와 연대를 강조함.
- 앞서 유 장관은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함. 유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히라노 관방장관도 “양국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 日납치담당상 “韓정부와 김현희 방일 협의”<RFA>(9/30)

-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협의해 대한항공(KAL) 항공기를 폭파한 범인 김현희씨의 일본 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함. 나카이 납치담당상은 29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관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16명을 처음 면담한 자리에 배석, 40분간의 면담이 끝난 뒤 이렇게 말함.
- 그는 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함.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과 면담에서 “일본 정부가 먼저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日외상 “G20 한국회의 성공 지원”(9/29)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29일 내년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중요한 회의이므로 성과가 있는 회의가 되도록 일본으로서도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



원을 하겠다”고 밝힘. 그는 이날 오후 도쿄(東京)에 있는 총리 관저인 이쿠라(飯倉)회관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과 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함.

- 오카다 외상은 또 “미국 피츠버그에서도 확인됐듯이 G20 정상회의는 세계를 대표하는 각국이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한국에서 개최된다는데 대해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외상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함.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100주년인 내년에 일왕(日王)의 한국 방문을 초청한데 대해서는 “아직 (양국 정부 간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신중히 생각하겠다”고 말함.
- 유명환 장관은 “이 대통령의 (일왕 방한) 언급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열린 마음을 갖고 한·일 간에 있을 수 있는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안다”며 “현재 한·일 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그는 또 민주당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민주당 새 정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역사를 직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데 대해 환영하고 기대한다”며 “과거 역사를 잊을 수는 없지만, 한·일 관계가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00년을 위한 진정한 한·일 신시대를 위해 진정으로 상호 노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한·일 양국은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진지한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유 장관은 밝힘.

라. 한·러 관계

● 한·러, 북핵문제 해결 긴밀 협력 합의(10/3)

- 한국과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제10차 한·러 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힘.
- 양국은 지난달 29일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교역·투자 증진, 서 캄차트카 해상광구 공동개발,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극동지역 물류단지 조성 등 양국간 실질협력 사업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양국은 또 수교 20주년을 맞는 내년이 한·러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교기념 행사 ▲고위 인사교류 ▲한·러 대화 출범 ▲양국 경제단체간 교류 등을 추진키로 함. 이 차관보와



보로다브킨 차관은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와 이란 등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외교부 관계자는 “한·러 양국은 이번 협의사항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차기 정책협의회를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외교부간 정례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함.

마. 미·중 관계

● 美스타인버그 中관리와 북핵 협의(9/29)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측 고위 관리들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이날 오전 왕광야(王光亞)·우다웨이(武大偉)·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해 미·중 관계와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장 대변인은 또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楊潔지<兼대신 虎들어간廉>) 외교부장과 잇따라 회동해 양국 관계와 공동관심사를 논의한다고 말함.
- 장 대변인은 북핵 문제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북·미 양자 회담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 등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됨. 이에 앞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9일 오전 베이징에서 마샤오텐(馬曉天)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과 회담을 가짐.
- 미국과 중국 관리들의 회담은 북한이 다이 위원의 방북 기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10월 4~6일)을 앞두고 이뤄진 것임.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핵폐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협상 재개에 돌파구를 열 중대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28일 홈페이지에 장위(姜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올려 “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과 정부 초청으로 4~6일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면서 “원 총리는 북한 지도자와 만나 양국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에도 참석한다”고 밝힘.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앞서 베트남 하노이(26~27일)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7~28일)를 방문한 뒤 28일 베이징에 도착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7일 하노이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통일된’ (unified)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미국 정부는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순방에는 성 김 국무부 6자회담 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 등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 미·일 관계

● “美, 日에 東亞공동체구상 반대 전달”(9/29)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지난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미국을 제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전함. 신문은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직후 방미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신뢰관계 구축에 자신감을 표시했지만,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가 오히려 강해진 셈이라고 지적함.
- 소식통에 따르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반대한다는 의사는 지난 24일 하토야마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 직후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일본 정부 고위 관리에게 전달함.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아시아 정책은 미·일 동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는 다음 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자유무역협정, 금융, 통화, 에너지, 환경, 재해 구조 등 가능한 분야부터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들이 한 걸음씩 협력을 쌓아가는 연장 선상에 동아시아 공동체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한다”고 밝혀 자신의 지론인 이 구상 실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함.
-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2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언급하며 “중·일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차이점을 넘어선 신뢰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미국을 제외하고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
- 그러나 전부터 이 구상을 경계해 온 미국측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진의를 확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신과 경계감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측은 조지 부시 전 정권 때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음.



사. 중·러 관계

● 中-러시아, 내달 총리 회담(9/30)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다음 달 초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총리가 다음달 12~14일 원자바오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힘. 장 대변인은 “푸틴 총리는 10월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함.
- 장 대변인은 “양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위기 극복 방안과 지역 경제 및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이에 앞서 중국 공안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국가 사법당국이 동투르키스탄 테러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테러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아. 기타

● 中, 키르기스스탄에 군사원조(10/2)

- 중국은 1일 키르기스스탄에 500만 위안(9억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왕카이원(王開文) 주키르기스 중국 대사는 이날 키르기스 방위사령부에서 군복, 군용차량, 컴퓨터 등 500만위안 상당의 군용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 중국은 분리·독립 시위가 잦은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에 인접한 키르기스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키르기스에 무상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의 이번 군사원조는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공됨. 중국은 신장의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인접 중앙아시아국을 기지로 이용하고 행여 인접국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키르기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SCO 회원국이며, 미국이 이곳에 공군기지를 둘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임.

● MB “남북·국제이슈 주도 노력할때 됐다”(9/30)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G20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남북문제 당사자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 미국,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고 지적한 뒤 “남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 아니냐.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



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북
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
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며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
힘.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바꾸라
는 것은 제안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면 정부가 검토한 게 있어서 내
놓겠지만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소통을 위해 지역 위해 일할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함.
- 이 대통령은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사람도 없다. 구의원도 없다.
시의원 한사람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 없다”면
서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 소통 아무리 얘기해도 이대로 두
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돼도 소통이 안된다”고 지적함. 이 대통령은
이어 “1890년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고 한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됐
는데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 아니냐”고 반문하고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 따라 하게 됐는데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G20 정상회의와 관
련, “G20 정상회의 유치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
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G20 의장
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그러면
서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대표를 참여시켜서 함께
의논하는 장을 만들겠다”며 “가능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관
련된 지원 문제, 모든 기구가 협력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의제로 삼
을 것”이라고 밝힘.

● “中, 육군 70만명 감축..해·공군 강화”(9/30)

- 중국이 군 현대화 차원에서 향후 2~3년 내에 육군 70만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은 중국 인민해
방군이 최첨단 정예 군대 육성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말함. 소식통들은 인민해방군이 육군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해군과 공군 병력은 증강할 계획이라면서 대학졸업자들도 징집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육군 감축과 해·공군 증강은 현재 230만명에 달하는 중국군 전체 병
력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음. 이 같은 군 감축 계획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발표 시기도 명확하지
않음.
-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병력 감축으로 자금을 마련해 훈련을 개선하
고 첨단 무기를 사들여왔음. 해군은 항공모함 건조를 검토하고 있음.



오래된 항공기를 은퇴시키거나 교체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음.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강화된 위상에 걸맞게 외국파병을 늘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230만명에 달하는 중국군 병력은 2위인 미국의 150만명과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음. 중국 인민해방군은 500만명에 달하는 ‘홍군’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음.

● 중국 공산당, 간부 직선제 확대키로(9/30)

- 중국 공산당이 지방 당 간부들에 대한 직선제를 확대하고 기층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함. 이 신문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폐막한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에서 ‘새로운 정세 하에서 당 건설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이란 문건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당 건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원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기층 당 조직 지도자 선발에서 직선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이들은 “모든 당원들은 당을 감독하고 당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으며 직선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함. 간부 직선제는 당 조직에만 해당되며 정부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국 공산당은 또 일부 지방의 현과 도시의 구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당 대표대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이는 막강한 지방 당 조직에 대해 의회식 견제를 하기 위한 것임. 중국 전국의 각급 공산당 대표대회 대표들은 5년마다 한 번 씩 열리는 전국대표대회 기간에만 활동을 했으며 비회기 기간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 왔음.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당 간부 직선제 확대와 지방 공산당 대표대회 상설화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함.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이공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장기집권을 해온 당내에서 일부 민주적인 요소를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조치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함. 장밍(張鳴) 런민(人民)대 정치학과 교수는 “당 기층에서 직선제와 다른 민주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당의 이미지와 통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

● 한·중·일 “포괄적 동반자관계 지속 심화”(9/28)

- 한국과 중국, 일본은 28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나가기로 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은 28일 오후 상하이 서교(西郊)빈관 호텔에서 제3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제츠 부장이 말함.



- 양 부장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전략적 상호신뢰 구축, 협력수준 심화 및 제고, 사회, 문화, 인적교류 지속은 물론 동아시아 협력 및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는 등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3국의 이 같은 합의는 지난해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의 기초를 이어받아 3국간 협력을 한층 더 진전시켜 나가자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양 부장은 또 한·중·일 협력 10주년을 맞아 다음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공동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담은 상호 정치적 신뢰제고와 호혜협력 및 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국제경제와 금융현황,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 대응, 유엔 개혁, 군축 비확산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음. 3국 외교장관은 내년 3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 日 자민당 간사장에 오시마씨(9/29)

-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29일 당의 2인자인 간사장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63)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함. 다니가키 총재는 또 정조회장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52) 전 농림수산상을, 총무회장에 다노세 료타로(田野瀬良太郎·65) 전 재무 부대신을, 국회대책위원장에 가와사키 지로(川崎二郎·61) 전 후생노동상을 각각 임명함.
- 오시마 신임 간사장은 9선 의원으로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 등을 역임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정권에서 국회대책위원장을 맡았음.

● <日 당정수뇌회의 설치..오자와 ‘힘’ 주목>(9/29)

- 일본 정부와 여당이 28일 갑자기 ‘정부-연립여당 수뇌회의(당정 수뇌회의)’를 설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지난 16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과 연립 여당인 사민당, 국민신당은 연립 여당 대표들이 참가해 정책 협의를 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 따라서 이날도 내년도 예산 편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료위원회가 소집됐으나, 이에 앞서 돌연 당정 수뇌회의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첫 회의가 열림. 주목되는 것은 회의 참가 대상임. 하토야마 총리와 사민당 대표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소비자담당상,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금융상 이외에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이 멤버로 참가한 것임.



- 이날 첫 당정 수뇌회의에서는 하토야마 총리의 방미 결과 보고에 이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 설명이 진행됨. 이 당정 수뇌회의에 대해 정부측은 “여당의 의견 교환의 장”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함.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기구가 민주당의 최대 주주인 오자와 간사장이 각종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음.
- 아울러 하토야마 정권이 ‘정부와 여당의 일원화’를 내세우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모순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반대로 이 회의 설치가 하토야마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노정시킨 것이란 시각도 있음. 이 회의가 ‘오자와 대책’의 하나로 설치됐는 관점에서임.
- 150여명의 의원을 휘하에 두면서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간사장을 맡으면서 당무와 국회 운영을 장악한 그의 의견을 수용할 장치를 두지 않으면 오히려 그를 자극, 정권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시각임.
- 민주당 내에서는 “오자와 간사장을 배제하고 정부와 여당의 일원화가 어려운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오자와 간사장과 신뢰 관계가 있는 후쿠시마 사민당 대표, 가메이 국민신당 대표가 연대해 하토야마 총리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9일 전함.

● <日 자민당 다니가키 새 총재>

- 일본 자민당의 28일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야당’ 자민당호를 이끌 선장으로 선출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64) 신임 총재는 지난 2006년 총재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해 승리를 이끌어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임. 그는 당시 선거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면서 수모를 당했지만, 이어 벌어졌던 두 차례 총재 선거전에는 출마하지 않다가 자민당이 8·30 총선 참패로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난파할 위기에 처하자 당을 재건하기 위한 역할을 자원함.
- 교토(京都)부 후쿠치야마(福知山) 출신인 그는 도쿄에서 아자부(麻布) 중·고교를 졸업하고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함. 부친인 다니가키 센이치(谷垣専一) 전 문부상이 사망하면서 당시 지역구인 교토 2구(현재 교토 5구) 보선에 출마해 첫 당선된 뒤 지금까지 10선을 기록함.
- 자민당 내에서는 초기부터 유망 정치인으로 거론되면서 과학기술청 장관, 국가공안위원장, 재무상, 국토교통상, 당 정조회장 등을 역임함. 2006년 패배에 이어 3년 만의 총재직 도전에서 성공했지만, 자민당이 사실상 54년간의 장기집권을 마치면서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 이어서 총리직에는 오르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았음.
- 다니가키 신임 총재는 온후한 인품을 가진 정책통으로 통함. 과학기



술청 장관이던 1998년에는 총리 경험자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씨가 오부치 내각에서 대장상으로 입각할 당시 다니가키 신임 총재를 정무차관으로 임명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각료 경험자이면서도 차관으로 취임한 적도 있음.

- 지난 2000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총리에 퇴진을 요구한 ‘가토(加藤)의 난’ 당시에는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하려는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자민당 간사장에게 “가토 선생, 당신이 대장인데 혼자서 돌격하면 안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던 것으로도 유명함. 그는 당시 가토 전 간사장의 최측근이었음.
- 도쿄대 재학 시에는 스키, 산악부에서도 활동함. 취미인 사이클 타기를 통해 길러진 체력도 강점임. 이런 체력을 바탕으로 그는 65세가 되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지원 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명예 소믈리에로 불릴 만큼 와인 애호가이기도 함.
- ▲교토 출신 10선의원(교토 5구) ▲도쿄대 법학부 ▲1983년 중의원 첫 당선 ▲과학기술청 장관 ▲금융재생위원회 위원장 ▲국가공안위원장 ▲재무상 ▲국토교통상 ▲자민당 총무국장 ▲자민당 정조회장 ▲2005.9~2008.5까지 다니가키파 회장



[참고 1] <그래픽> 북한 귀순선박 시간대별 상황 (연합뉴스, 10/4)



반중빈 기자 bjb@yna.co.kr / 20091004

- (서울=연합뉴스) 반중빈 기자 = 지난 1일 북한 주민 11명이 전마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귀순한 것과 관련, 군은 당일 오후 3시 22분 최초로 해당 선박을 포착한 뒤 3시간 38분만인 오후 6시 10분께 이들의 귀순 의사를 1차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북 귀순선박 김책 출발일자 및 군이 밝힌 당시 시간대별 조치 상황.

bjb@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04/0511000000AKR20091004055900043>
HTML



[참고 2] <스타인버그 美국무 부장관 문답> (연합뉴스, 9/30)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0일 미국의 ‘포괄적 접근’ 과 한국의 ‘그랜드 바겐’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면담한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협의를 거쳐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자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그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는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권 차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권종락)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대표단 일행이 지난 6월 방한 이래 다시 한국을 찾았다. 우리는 한·미간 정상에서부터 여러 레벨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간 현안 이슈들 특히 미래동맹비전선언의 확실한 이행과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의하자고 얘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해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자는 등 여러 가지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도 그동안 한·미가 협의해 온 접근방식과 같은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여러 계기를 통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했으며 한·미 양국은 내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스타인버그) 어제 중국에서 생산적인 협의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권 차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매우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 모든 자리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는 기후 변화, 경제위기 등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이슈 및 이의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조를 유지하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해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5자가 공감하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길로 나아가는 기회임을 이해해야 한다.



- ◇일문일답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낼 계획이 있다.: ▲(스타인버그)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협의를 거쳐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자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하며 우리는 북한이 그 기회를 잡는다면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다른 5개 참가국이 공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북한이 조기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신호가 있다.: ▲(스타인버그)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기회를 (북한에)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에 분명하게 호응하기를 바란다. 북한이 호응한다면 북한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은 분명히 대화과정에 복귀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스타인버그) 사진과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다. 이런 행사를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북핵 문제의 해결 노력이 서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의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과 한국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이 차이가 있다.: ▲ 그간 한·미가 협의해 온 사안으로,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가역적인 조치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2005년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북한과 중요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다.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그렇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과 우리가 얘기한 것은 완전하게 같은 길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30/0511000000AKR20090930117900043>.
HTML



[참고 3] <한·일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 문답> (연합뉴스, 9/29)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29일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에 있는 외무성 관저인 이쿠라(飯倉)회관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양국 외상은 또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협상의 틀이란 점도 재확인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요지.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4일 북한 방문에 대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일본의 입장에서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부탁했는가.

▲**오카다 외상** =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제 3국 외교장관 회의 때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갖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총리가 방북하므로 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의 과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여러 가지 좋은 움직임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나 그 결과를 조기에 연락을 받아서,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또는 미국이 서로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회견을 통해 일왕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다. 양국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는가.

▲**유 장관** = 이 대통령의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열린 마음을 갖고 한·일 간에 있을 수 있는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 현재 한·일 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오카다 외상** = 방금 유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신중히 생각을 하겠다.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9일 개최되는데, 하토야마 정권은 역사문제에 대해 직시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일본 새 정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가.

▲**유 장관** = 민주당 새 정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역사를 직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을 환영하고 기대한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잊을 수는 없지만, 한·일 관계가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00년을 위한 진정한 한·일 신시대를 위해 진정으로 상호 노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카다 외상** = 9일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결정돼 있지는 않다.

--내년에 한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넓게 보면 아시아에서 열린다. 평소 민주당 정부는 아시아 중시 외교를 강조했다. G20 한국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가.

▲**오카다 외상** = 미국 피츠버그에서도 확인됐듯이 G20 정상회의는 세계를 대표하는 각국이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그것이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대해 같은 아시아의 국가 일본 외상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중요한 회의이므로 성과있는 회의가 되도록 일본으로서도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choinal@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29/0511000000AKR20090929232300073>.
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